
정책 정보

정부, 세제개편안 발표

- 주요 내용

- 정부는 중산층 서민 지원과 지식 기반 경제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제지원 방안을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국회 동의를 얻은 후 시행키로 함

<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>

| 정 책 목 표 | 내 용 |
|-------------|--|
| 중산 · 서민층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근로자 우대저축,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비과세시한 2002년 말로 연장- 3년 이상 우리사주 보유시 배당소득 비과세- 스톡옵션 행사 가능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- 개인연금 납입금액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|
| 지식기반경제 구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업종 범위 확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지원내용: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업, 기술개발투자액 공제- 전자상거래 시설투자 세액공제(투자금액의 5%)- 전화세 부가가치세로 전환- 예비 창업 벤처 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때 등록세 면제 |
| 기업과세제도 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차입금 지급 이자 손비 인정시 기준 차입금 범위 축소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현재 자기자본의 5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로- 지방 이전 기업 세금감면 대상 확대- 본사 지방 이전시 세제지원 확대- 지역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- 워크아웃 기업의 회사분할시 세제지원 강화 (CRV 배당소득, 주식양도차익 비과세) |
| 기 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지방주행세 인상 (현재 교통세액의 3.2% 수준)- 에너지세제 개편 (자동차보유세 완화 등).- 제3시장 주식거래시 양도가액에 따라 과세 (현재는 양도가액과 평가가액 중 큰 곳에 과세) |

- 평가

- 디지털 경제, 지식기반 경제에 적합하도록 관련세제를 개편키로 한 것은 시의에 맞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
- 그러나 각종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세부 절차적 방안과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이 차질 없이 뒤따라야 할 것임

(박용주 연구위원 yjpark@hri.co.kr ☎ 3669-4012)

최근 주요 정책(2000. 5. 8 ~ 5. 21)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전력산업구조개편 법안 제상정 추진 | 산업자원부 (5.19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전을 분할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 - 자회사 설립요건 완화, 고용승계 등의 내용 규정 |
| 무역수지 및 실물 경제 대책 협의 | 민주당-정부 (5.18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역 대책: 총력수출체제 구축, 에너지 가격개편 등 수입유발적 제도 개선, 에너지절약시책 추진, 부품·소재산업 적극 육성 - 경제 대책: 무역수지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거시경제 정책 운영, 건전한 설비투자 확대, 기존 제조업과 신산업의 균형 발전 등 산업정책적 대응 강화 |
| 부가통신산업 종합 발전대책 마련 | 정보통신부 (5.17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적: 부가통신 이용 환경 개선,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을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- 주요 내용: 하반기부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실시,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망 확충, 인터넷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와 보급 본격 추진 등 |
| 인터넷 정보가전 산업협의회 출범 | 정보통신부 (5.17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적: 인터넷 정보가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추진 - 참여 업체: 12개 가전업체, 7개 통신사업자, 66개 통신제조업체 등 102개 민간업체 및 연구기관 |
| 도시계획시설기준 에 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| 건설교통부 (5.16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의 시설 이용 편의 제고, 도시환경의 질 향상, 도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 - 대도시 도심지역에서 도로,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적 도시계획이 가능해진 것이 대표적인 내용 |
| 한국 및 대한투신 조기경영정상화 추진계획 마련 | 재정경제부 (5.1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적: 한국·대한투신의 대규모 대우채 손실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 추진 - 내용: 정부, 산업은행, 기업은행 등의 긴급 공공자금 투입 |
| 정보시스템대행업 (ASP) 육성 추진 | 정보통신부 (5.1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SP 산업: 인터넷 데이터 센터(IDC)에 저장된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임대하는 산업 - 주요 내용: 인터넷 기반시설 확충, IDC 신설, ASP 인증제 도입 |
| 증권·투신사의 신경영지배구조 정착 방안 마련 | 금융감독 위원회 (5.1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적: 개정된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새로 도입된 경영지배구조의 올바른 정착 유도 - 주요 내용: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, 이사회 기능 강화,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, 준법감시체제의 조기 구축 |

주요 정책 정보(2000. 5. 22 ~ 5. 28)

| | |
|----------|---|
| 5. 27(토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재정경제부) '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장기발전 방향' 발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자단 정책세미나 자료로 발표되는 이번 자료는 서강대 김광두 교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대우자동차 처리 등과 관련하여 장기적 자동차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 • 김광두 교수는 대우자동차 처리 문제와 관련한 용역보고서에서 조속한 해외매각이 최선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|
|----------|---|